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안

제안년월일 : 1996. 11. 7.

제안자 : 운영위원장

마포구의회는 북한정권이 우리의 다각적인 대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적반하장의 보복성협박을 계속하는 있는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대남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서만도 서해 5도지역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휴전선 비무장지대 등에서 여러 차례 노골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열망하는 7,000만 겨레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즉각 포기하고 무모한 각종 도발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정권은 금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후안무치한 보복협박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온 민족 앞에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정권은 북미 핵협정 파기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 강행 등 또 다른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물샐틈 없는 경계태세와 기강을 확립하고, 재도발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르도록 외교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의원일동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40만 마포구민들과 함께 대북 경

각심과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굳게 뭉쳐 북한정권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996. 11. .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의회사무국장 귀하

마포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별첨
2. 출석일시 : '96.11.26~12.2(7일간)
3. 출석장소 : 운영위원회실
4. 출석대상 : 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 및 해당직원)
5. 출석요구사유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끝.

1996년 11월 7일

운영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